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 정부, ‘금융 계급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금융권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금융지주사들을 불러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 속에서 중저신용자·취약계층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권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5대 금융지주사 임원들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5대 지주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50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포용금융 규모는 약 70조 원이다. KB국민(17조 원), 신한(12~17조 원), 하나(16조 원), 우리(7조 원), NH농협(15조 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은행권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며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금융지주 포용금융 이행 점검 착수
5대銀, 5년간 상생금융 508조 투입
2금융권 서민금융 역할 확대 강조
“팔 비틀기 시장 논리 위배” 지적도

할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 계급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재차 금융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점검과 더불어 금리 산정 구조, 채무조정, 연체 추심 방식 등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전반을 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9%(사회적 배려자 9.9%)로 낮추는 예산 증액안을 국회 정

무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정책금융까지 모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등 대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증상품 확대와 대안 신용평가(CSS) 고도화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까지 늘리면 연체율 상승 위험이 크다면 난색을 표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저금리로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

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PF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자영업자 대출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기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CSS나 여신 시스템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시장의 금리 산정 체계를 왜곡하고, 금융회사에 위험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시킨 배드뱅크 역할의 ‘새도약기금’ 출연금 부담에 더해,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대출을 떠안게 하는 것은 금융업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금리는 연체 확률이라는 명확한 통계에 기반해 책정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민간 금융이 대신 떠안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혜린 기자



청년 ‘일경험’ 참여 2배 꺾충

수원상의, 사업 성과보고회
참여기관 13개→37개 대폭 늘어
도 비영리 기관까지 범위 넓혀
우수 참여자 시상도 함께 진행

수원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 ‘2025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행사에는 멘토 31명과 청년 7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과정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수시채용이 확대되는 채용 환경에 맞춰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은 공공행정,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등 3개 분야에서 운영됐다. 참여 기관은 지난해 13곳에서 37곳으로, 참여 청년은 150명에서 2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공행정과 경영사무 분야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경기도 산하 기관과 비영리단체까지 참여 폭이 넓어졌다. 홍보마케팅 과정은 수원컨벤션센터와 협업해 MICE 산업 기반의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MICE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15명의 청년 전원이 수료했고, 정규직 1명·계약직 2명의 취업자로 이어지며 성과를 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파트너십상’은 멘토와 인턴 간 협업 성과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멘토 윤효진·인턴 송선구) ▲

수원컨벤션센터(멘토 허설아·인턴 김세현)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멘토 김윤희·인턴 서민석)이 수상했다.

청년에게 수여되는 ‘미래인재상’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정대희) ▲수원문화재단(김수아)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신유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지현)가 받았다.

‘우수멘토상’은 ▲수원시정영구원(유현희) ▲수원문화재단(김다름)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김예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한송희)에게 돌아갔다.

수원상공회의소는 기관 모집부터 인턴 선발·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운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류 합격자 대상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역량과 희망 직무를 세밀하게 파악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한 실시간 민원 대응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 수원컨벤션센터와 협업해 추진한 ‘MICE 특화 과정’을 2026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문화재단과 함께 ‘K-문화관광 in 수원’ 특화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AI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IT 직무 인재양성 프로그램’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청년들에게 폭넓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영덕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역량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경험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다경 기자

14년 숨만 쉬어야 서울에 ‘내 집’ 마련... 경기는 7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지난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젊은 층의 자가 점유율과 주거 면적이 모두 줄어들며 주거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 이후 첫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최근 6년 사이 가장 길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19~34세)의 자가점유율은 12.2%로 전년(14.6%)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신혼 가구(결혼 후 7년 이내) 역시 46.4%에서 43.9%로 낮아졌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까지 감안해도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75.7%에서 75.9%로 소폭 상승해 세대 간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주거의 질적 수준도 후퇴했다. 청년의 1인당 주거면적은 32.7㎡에서 31.1㎡로, 신혼 가구는 27.8㎡에서 27.4㎡로 각각 줄었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14㎡, 부부 26㎡, 부부+1자녀 36㎡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청년 6.1%~8.2%, 신혼 1.8%~2.5%로 모두 증가했다. 청년층은 전체 가구 평균(3.8%)을 크게 웃돌아 주거 빈곤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청년층의 주거 형태도 열악한 실태를 드러냈다.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거주’에 살아가는 비율은 5.3%로 전체 평균(2.2%)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택 구매 부담은 서울에서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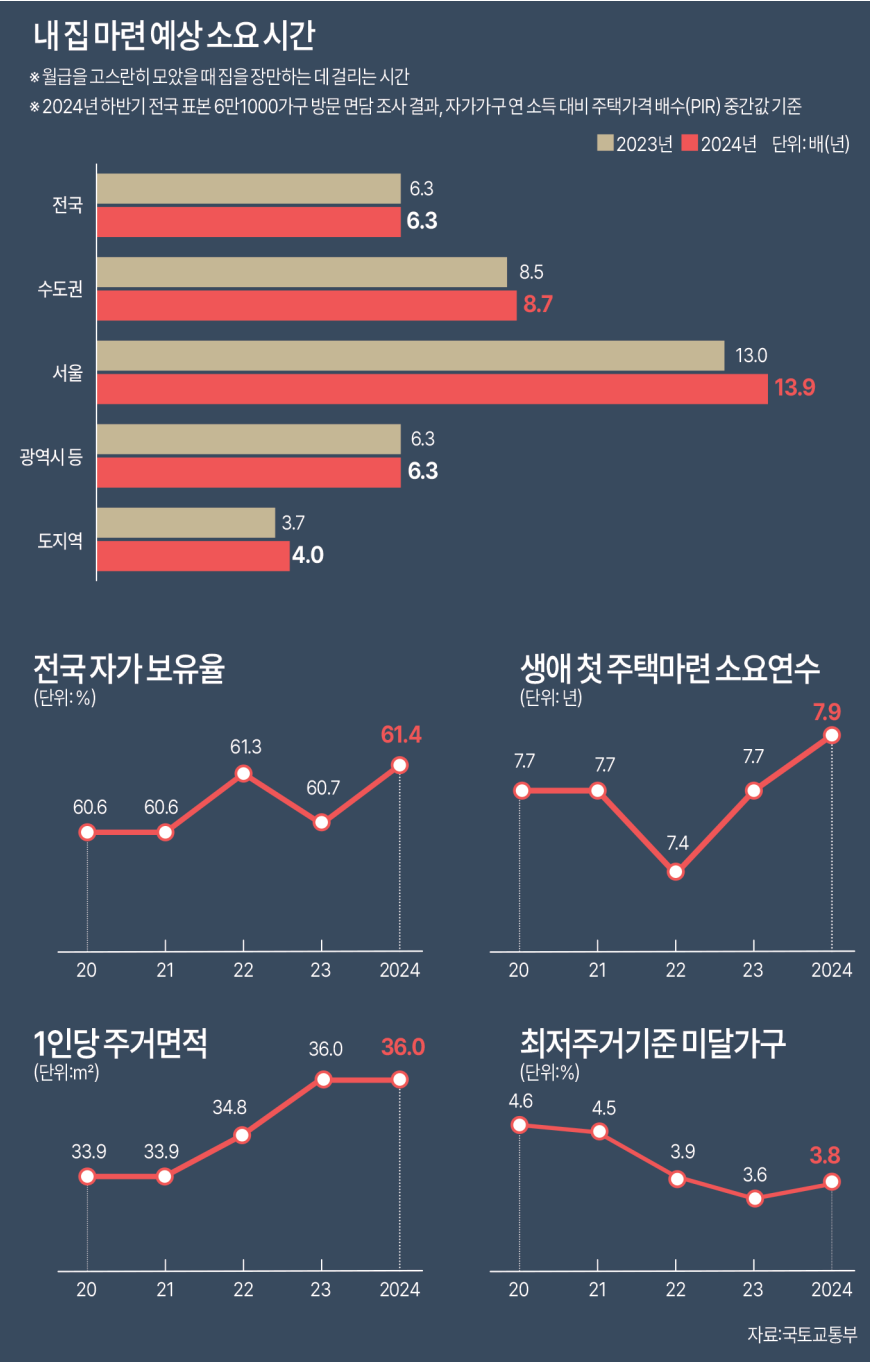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작년 주거실태조사
서울 연 소득比 주택 가격 13.9배
자가 거주 비중↓ 젊은 면적 비중↑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심화
1년 새 점유율·면적 모두 줄어

서울 자가 가구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중간값 기준 13.9배로, 월급을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 한 채 마련에 약 14년이 걸리는 셈이다.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 주요 도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자가보유율은 61.4%로 0.7%포인트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도(69.4%)·광역시(63.5%)·수도권(55.6%) 순으로 높았다.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도 58.4%로 1%포인트 늘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자가 가구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6.3배였으며, 수도권은 8.7배로 전년(8.5배)보다 상승했다. 광역시(6.3배)와 도(4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주가 된 뒤 생애 처음 주택을 매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9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6.9년) 이후 가장 긴 수치다. 전문가들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악화는 주택 가격 접근성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단기적 대출 확대가 아닌 공공임대 확대·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다경 기자



“AI 거품론? 수요 폭증” 삼성, 450조 투자 확대

삼성이 국내 산업과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해 향후 5년간 총 450조 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생산 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협력회사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차세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 골조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평택 5라인은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라인 확보 차원이다. 평택 사업장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생태계에서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는 AI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삼성 SDS는 전남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경북 구미에는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센터는 2028년까지 1만 5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해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며, 정부의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목표를 지원하는 다.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공조기 전문가

반도체·AI·배터리 등 전방위 확대
지방 거점 구축해 균형발전도 추진
6만 명 채용·8000개 일자리 창출
협력사 설비투자·기술개발 등 지원

업 플랫폼을 인수하며 광주에 생산라인을 구축, 산업용 공조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삼성SDI가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울산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수월 연구소에서 전고체 파울렛 라인을 설치한 삼성SDI는 시제품 생산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8.6세대 OLED 생산 시설에서 내년부터 IT기기용 디스플레이를 양산할 계획이며, 삼성전기는 부산사업장에서 서버용 패키지기판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 외에도 사회공헌(CSR) 프

로그를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8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SSaFY(삼성청년SW·AI아카데미)는 전국 5개 캠퍼스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SW·AI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누적 취업률 약 85%를 기록하고 있다. 희망디딤돌2.0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C랩 아웃사이드는 외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청년희망터는 지역 청년활동가를 지원하며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등 공익 활동을 통해 지방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투자도 병행된다. 삼성은 설비 투자, 기술개발,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과 ESG 전환을 돕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회사 임직원에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2025년 상반기까지 8146억 원에 달한다.

오다경 기자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영문공시 내년 5월부터 확대 적용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확대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 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 공개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문공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을 대상으로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 요건을 충족한 111개사가 일부 항목만 영문으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경영성과 55개 전 항목과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거의 모든 거래소 공시가 영문으로 제공된다.

공시 시한도 앞당겨진다. 대형 상장사

‘깜깜이’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는 국문 공시와 동일 시점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기업은 기존처럼 영업일 내 제출 방식이 유지된다. 번역 부담 확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를 확대하는 3단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주권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주총 간건별 찬반·기권 비율이 당일 공시돼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진다.

임원·계열사 관련 안건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상장사는 총주주이익률(TSR)과 임원 보수 한도·비교보수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주주들이 보수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마다 3월에 몰리던 주총 일정도 분산된다. 4월 주총 개최 기업에는 공시 우수법인 가점, 불성실공시 벌점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관행처럼 굳어진 ‘3월 몰림’ 구조를 깨 주주 참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혜린 기자